

## 2. 정부 정책 동향 (4. 7~4. 14)

- **건설교통부, 토지개발공급 및 임대시장 개방 (4. 7)**
  - 5월부터 외국인의 산업 및 유통단지 개발을 허용하고, 투기 조장을 막기 위해 주택공사, 토지공사,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제3섹터 방식 도입
- **외국인투자위원회, KOTRA에 M&A 중개소 설치 (4. 7)**
  - 국내 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M&A를 지원하며, 외국인종합투자정보망도 구축
- **기획예산위원회, 정부출연연구소 절반으로 통폐합 (4. 8)**
  - 인문사회계 출연 연구기관은 부처당 1개로, 과학기술계는 유사 기능별로 통합
  - 또한 시장원리에 입각한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연구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
- **소비자경제심의위원회, 98년도 소비자보호 종합대책 마련 (4. 9)**
  - 안전에 문제가 있는 제품을 제조업자가 회수하는 리콜제도를 전제품으로 확대하고, 전자 상거래 인증제도, 집단소송제도를 99년부터 시행
- **과학기술부, 과학기술위원회 설치 (4. 9)**
  - 과학기술 관련 정책 조정, 예산 사전 심의 및 우선 순위 결정 기능
- **통일부, 기업의 북한 투자에 대한 규제 폐지 (4. 10)**
  - 남북 경제 협력 활성화를 위해 대북 경험 승인 기준의 완화 및 절차를 간소화하고,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
- **정보통신부, 통신사업에 대한 M&A 자유화 (4. 10)**
  - 금지되어 있던 비통신 사업자에 의한 통신사업 M&A를 허가제로 바꾸어 허용
  - 또한 통신회사의 외국인 투자 한도를 현행 33%에서 99년에는 49%로 확대
- **금융감독위원회, 은행 구조조정 계획 재수립 지시 (4. 11)**
  - 기존 정상화 계획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, 외국인 자본 유치 및 자회사 통폐합을 골간으로 하는 구조조정안을 마련토록 함
- **재정경제부, 정부 보증 은행 외채에 대해 수수료 부과 (4. 13)**
  - 신용등급과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0.2%~1.5%의 수수료를 부과하여 실업 대책 재원으로 활용
- **국세청, 사채 출연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면제 (4. 14)**
  - 기업 부채를 갚기 위해 사채를 출연하는 등 구조조정에 모범적인 기업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면제하되, 음성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강화
- **행정자치부, 공유재산 관리제도 개선안 확정 (4. 14)**
  - 외국 기업은 지방자치단체와의 수의 계약을 통해 공유지를 임대, 매입할 수 있고, 「공유지 신탁제도」를 도입하여 부동산신탁회사가 상업 및 복지시설을 건설하여 임대 및 분양하고 이익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납입
- **경제대책조정회의, 금융·기업 구조개혁 촉진 방안 마련 (4. 14)**
  - 10조 원 규모의 기업 구조조정기금을 신설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견·중소 기업을 지원하고, 부실채권 정리기금도 20조 원에서 30조 원 이상으로 확대

(곽 용 선 yskwak@hri.co.kr ☎724-4058)